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hanges in Perceptions of Childbirth among Women in Relation to
the Korea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초빙교수 이명호*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department at Donggang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Lee, Myung-h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low birth rate in Korea reflects the declining desire to have children in this country due to rising emphasis on personal lifestyle. Since this phenomenon has accelerated, boosting the birth rat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ask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erform a case study based on women's lived experience to understand how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boost the birth rate has affected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among wome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effect of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women's perceptions has been fairly low. Second, the social environment for encouraging childbirth is inadequate. Third, the economic burdens associated with childbirth and child care are still significant. Finally, the impact of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childbirth has been

* 주저자, 교신저자 : 이명호 (anjelmolmh@hanmail.net)

minimal.

Based on these findings, various motivations for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childbirth among women were identified, leading to the following conclusion: Establishing a long-term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n effective way to boost the childbirth rate.

Key Words : 출산장려정책(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출산의식(perception of childbirth), 출산율(birth rate), 사례연구(case study)

I. 서론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가입여성 한명당 1.3명(2012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통계청, 2012).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우리의 사회, 경제,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출산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악순환이 계속되어 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충환·신준섭, 2013).

오늘날 한국에서는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이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초혼 연령은 꾸준히 상승하고 결혼보다는 일에 우선권을 두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안종범, 2010). 그래서 출산율 제고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의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기별 추진목표를 보면 제1차 기본계획 기간(2006~2010년)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

경을 조성하고, 제2차 기간(2011~2015년)에는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한 후, 마지막 제3차 기간(2016~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출산율(1.6명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그 동안의 출산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 뿐만아니라 경험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는 인구학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출산율을 예측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었다(김두섭·박상태·은기수, 2002; 이충환·신준섭, 2013; 황진영, 2013). 최근 들어서는 출산율이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6; 남정은·정정희, 2013; 홍정화, 2012). 그러므로 경기침체 및 경제의 불안정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수준의 향상 등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승권, 2004; 이소영, 2008; 안종범, 2010). 이러한 요인들은 미래의 가족자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최남숙, 2007).

그 동안 2006년 1차 기본계획 이후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임상규, 2007; 최남숙, 2007; 이순배, 2009; 이미란, 2009; 배상석, 2010; 김민정, 2011; 최정미, 2011; 이충환·신준섭, 2013, 송현재·김지영, 2013)

는 다수가 있고 여성의 출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윤소영, 2005; 이소영, 2008; 이선형, 2009)도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과 여성의 출산의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냄으로써 정확한 장래 인구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 등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의 출산의식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탐구적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하여 출산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작성하여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1.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의 출산의식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장래인구 예측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우선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제적 지원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의 효과성 분석(석호원, 2011; 송현재·김지영, 2013; 박지영·조정래, 2013; 최정미, 2011)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정책을 제외한 다양한 정책들의 활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leebos(2003)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보육비지원/양육비와 같은 직접적 지원정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조성 정책, 인력 및 물품지원, 건강지원, 정보제공,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의 복지정책, 세금감면정책 등 간접적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를 사회적 환경 조성 출산지원 정책, 경제적 지원정책, 기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출산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가정과 사회의 성 평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 성 평등 양립지원 정책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출산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leebos, 2003).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인 모성휴가와 부모휴가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갖고, 둘째 자녀의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nsen, 2004). 이러한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 요인은 출산·육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립을 목표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다(Swedis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이삼식 외, 2009; 최남숙, 2007). 국내의 연구에서도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가임여성들의 출산 양육 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2008; 이미란, 2009). 이성용(2009)의 연구에 의하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관련 정책은 첫째 아와 둘째 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셋째 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지원

OECD 국가들에서 실제 자녀보육비용을 측정한 결과, 보육시설과 아동수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 보육서비스 제공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국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육비용은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Ermisch, 1989). 그리고 보육시설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다(Blau & Robins, 1989).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은 출산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이소영, 2008; 최숙희, 2008).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빈곤아동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수당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인 선택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rnby & Cigno, 1988; Whittington, 1992). 조세 혜택을 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감면이나 세금 환급은 실제로 양육 비용을 대치하는 데는 미미하다는 연구(이재경·조영미·유정미·이은아, 2005)가 있고, 노승희(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일환인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의 확대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2013년 출산·육아 개선정책으로 자녀장려세제(새아기장려금)의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연소득 4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출산장려를 위해 환급형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의원 입법중이다. 그리고 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소득구분없이 0-5세 아동 전 계층에 지원하고 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그러나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현실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출산 의식으로 나타난다(조선일보, 2009).

3) 기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국민 연금보험료 경감과 건강 보험료 경감은 출산 휴가 기간 중에 사회 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여 모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모자 건강 검진 강화는 보건 의료적인 비용을 줄여주고 여성 생식 보건 및 태아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관계부처 합동, 2006).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모성·영유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 센터를 설치하여 불임 부부 지원, 임신부 산전 후 관리,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출산·육아 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여성 생식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관계부처 합동, 2006; 최남숙, 2007). 산부인과나 조산원의 의료기관 외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5만원의 출산비가 지급되며 출산 후 2주간 1일 8시간 12일 동안 신생아 및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산모가 출산휴가를 신청시 최대 405만원 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 후 복귀하는 경우도 계속 고용지원금을 240만원 지급한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그리고 대다수의 지자체가 출산교실을 거의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유식 지도, 건강상담 등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는 도시에 비해 건강상담, 성상담·성교육, 유산예방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영·방은령, 2008). 이와 같이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출산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한승준, 2002).

2. 여성의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의 출산 저하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결혼 연령 상승과 더불어 사교육비와 공교육비의 문제로 인한 자녀 양육 부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지적되고 있다(윤소영, 2005; 이선형, 2009). 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로 나타났다(김태현, 2005).

여성의 출산의식은 여성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려는 동기의 반영을 의미하며,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가치로 분류되어 설명되고 있다(Hoffman & Hoffman, 1973).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을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리라고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뜻하며, 심리적 가치는 기혼으로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태 즉, 즐거움, 행복, 혹은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이 이에 속한다(이미란, 2009, 재인용). 기존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보면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문화·정책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용복·이소희, 2004; 윤소영, 2005; 이인숙, 2005; 차경옥, 2005; 이시원·김영기·이성진, 2006).

이와같이 선행연구는 출산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임상규, 2007; 최남숙, 2007; 이순배, 2009; 이미란, 2009; 배상석, 2010; 김민정, 2011; 최정미, 2011; 이충환 외, 2013, 송현재 외, 2013)와 여성의 출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윤소영, 2005; 이소영, 2008; 이선형, 2009)는 다수가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정책과 여성의 출산의식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III.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로서 사례연구

질적 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관한 탐구 수준의 접근을 시도할 때, 민감하고 정서적

으로 깊이 있는 문제를 연구할 때 유용하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도출할 때, 수량화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데 유익하다(Padgett, 200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적 연구의 사례연구는 Yin(200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현상과 맥락 사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즉,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지각되어지는 출산 의식이 어떠한 일관된 흐름으로 형성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실제적인 맥락(real-life context)을 찾아내기 위해서 현재의 출산 의식 현상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내면의 출산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이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을 다루고 다양한 자료와 증거의 다원화를 위해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전에 발달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을 경험한 여성이라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된 ‘현장’내에서 여성의 출산의식이라는 ‘사건’에 대한 여성의 주관적 출산 의식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사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여성의 출산의식이라는 ‘사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시간적 ‘경계’를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경험한 여성들 중에서 연구 목적에 합치되도록 연구 질문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 1>과 같이 13명의 연구참여자를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사례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문서나 인터뷰, 면접이나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	연령	학력	출산 희망 자녀수	변화
A	27세	대졸	2명	직장여성, 첫아이 임신중
B	33세	대졸	2명	직장여성, 3개월된 딸1
C	35세	고졸	2명	주부, 딸2, 4세, 12개월
D	32세	고졸	1명	주부, 현재 임신중
E	39세	대졸	1명	직장여성, 아직 아이없음
F	33세	고졸	2명	주부, 둘째아이 임신중
G	32세	고졸	1명	직장여성, 아이없음
H	40세	중졸	3명	주부, 아들1, 딸1
I	35세	고졸	2명	주부, 아들1, 딸1
J	32세	대졸	2명	직장여성, 딸1
K	34세	대졸	1명	직장여성, 아들1
L	32세	대졸	2명	직장여성, 딸1
M	28세	고졸	2명	직장여성, 아들1

관찰, 참여 관찰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질적 자료에 거의 의존한다(최옥채, 2008). 본 연구는 2013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기초적인 문헌 조사를 하였고 심층면접에 의한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여성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경험을 총체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반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Sherman & William, 1994).

1회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1~2회 방문하여 추가 면접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보충적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현장 메모를 지속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이들 기록은 분석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사례의 맥락 안이나 사례가 나타나게 된 세팅 과정에서 풍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위해 사용된 반 구조화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산장려정책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고계신지요?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그동안 출산에 장애가 되었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출산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출산장려를 위해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의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 앞으로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생각나는대로 말씀해주십시오.

3. 자료 분석

사례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질적 자료 분석은 의미를 가진 단위(meaning unit)인 개개의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연구 주제와 연결 짓는 작업이다.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은 상호작용적 과정이다(Yin, 2003). 작업 면담한 자료 분석은 범주적 합산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어떤 하나의 범주라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모으는 방식이다. 사례연구는 이 두 방식에 의존한다(Stake, 1995).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였다. 1회 면담이 끝날 때마다 녹취된 내용으로 8시간 정도의 필사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조자에게 면담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받아 정확성을 기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녹음한 자료는 축어록의 형태로 모두 기술한 뒤, 반복적으로 개방 코딩을 하면서 발견적 방법으로 개념을 찾아갔다. 자료를 수집 후 다음 면담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면담을 종료하였다.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 중에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일반화와 추상화 작업을 거쳐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에 의해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어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와 관련된 가능한 주제들, 즉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29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찾아내어 다시 8개의 하위범주로 범주 합산을 한 후에 4개의 범주를 해석적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출산장려정책을 경험한 여성들 중에서 연구 주제에 맞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만을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는 연구에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연구 텍스트 상에 참여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는 기밀 유지에 힘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타당성 획득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익명성 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Cresswell, 1998).

5.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엄격성은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포함한다(김미옥, 2007).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추구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참여자의 지각과 경험의 진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연구의 신빙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와 다시 만나 기술한 내용과 연구참여자가 면담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연구결과를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 연구 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즉 일반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표 2〉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의미있는 개념
출산장려의 체감성 낮음	출산장려 홍보 부족	구체적인 내용 모름
		피부에 와 닿지 않음
	출산 유인 결여	지원금 현실성 없음
		실질적인 도움 안됨
출산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미비	일과 가정 양립 위한 보육서비스 부족	아이 맡길 곳 걱정
		직장여성 위한 보육시설 부족
		종일제 보육시설 미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불안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어려움
		보육시설운영 직장여성 배려안됨
	출산장려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아님	직장과 가정일 병행하기 힘들
		출산여건이 허락되지 않음
		출산에 많은 비용 부담
		자아실현에 걸림돌
		직장분위기 출산에 부정적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여전	육아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계속되는 양육비
		의료비 만만치 않음
		출산에 세심한 배려 부족
	자녀 교육비는 큰 부담	사교육비는 출산의 장애물
		자녀교육비 부담에 노후 걱정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 너무 커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역부족	출산장려정책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눈치 안보는 정당한 지원이 되어야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지원 필요
		출산 병원비 지원 미흡
		다른 출산장려정책과 연계 부족
		출산에 국가가 책임감 가져야
	단기적 일시적인 정책은 출산의식 변화에 한계	자녀들의 비전 불투명
		자녀의 먼 미래가 걱정
		지원이 지속될지 의문

아닌 다른 여성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그들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의미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반복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신뢰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 경험이 많은 교수에게 연구결과와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반에 관해 평가 받고 보완을 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즉 객관성으로 나타난다. 연구자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견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도출한 내용에 대한 비평은 유보한 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연구 결과를 편향적으로 분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내면의 감춰졌던 부분의 출산의식을 연구참여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표 2>와 같이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와 관련된 가능한 주제들, 즉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이 패턴을 가지고 29개의 의미 있는 개념으로 다시 8개의 하위범주로 범주 합산을 한 후에 4개의 범주로 해석적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출산장려의 체감성 낮음

출산장려 홍보 부족

출산여성들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보육료지원정책 외에는 대부분 많이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고 다른 장려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홍보도 부족하여 출산장려정책의 체감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지자체가 출산교실을 거의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유식 지도, 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는 도시에 비해 건강상담, 성상담·성교육, 유산예방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영·방은령, 2008).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 수당 등 경제적인 지원 외 다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흥

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A: 아무래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유치원비는 거의 무료로 보내잖아요. 그 외의 지원은 어느 것이 있는지 아직 초보라서 출산 지원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출산장려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 J: 보육료처럼 출생아 건강지원이나 산모건강서비스 같은 것도 국가에서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모의 임신 출산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잘 모르고 피부로 외당지 않아요.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산 유인 결여

보육료 지원 외에 아동 수당 등은 너무나 지원이 부족하다. 많은 양육 비용을 감당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소득구분없이 0-5세 아동 전 계층에 지원하고 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그러나 연구결과에서는 보육료 지원 외에 다른 출산 장려정책은 현실적인 출산 유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B: 아동수당은 몇 개월에 얼마를 주잖아요. 그런 정도는 기저귀 몇 개 사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 금액은 현실성이 없어요.
- G: 보육료지원 뿐만 아니라 중식비, 식비, 교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실질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출산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미비

일과 가정 양립 위한 보육서비스 부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직장엔 보육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집안에서도 가사 일을 전담하면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출산을 제고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 요인은 출산·육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립을 목표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다(Swedis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이삼식 외, 2009). 본 연구결과에서도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부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 직장에 다니면서 출산 준비 하느라 너무 힘드네요. 육체적으로 힘드는 것보다도 출산 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출산 후에 많이 쉴 수 있는 직장 분위기도 아니고, 딱히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 더욱 어렵네요.
- B: 직장 일도 해야죠, 아이도 보육시설에 맡겨야죠, 출근할 때면 너무 바빠요.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갖추든지 직장 가까운 곳에 맡길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 C: 유치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선생님들이 만나절만 나오시니까 맡기기가 부담스러워서 시택에 맡기고 출근을 하거든요. 종일제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K: 갓난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자체가 불안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데, 그 비용도 5, 6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지요.
- J: 민간 보육시설은 어쩐지 믿음이 안가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고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낼 수가 없어요.

L: 늦게까지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도 더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출산장려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아님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기업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되지 않아 산모 건강을 위하여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어려운 실정이고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분위기로 나타났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가임여성들의 출산 양육 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지적된다(이미란, 2009). 이성용(2009)의 연구에서도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관련 정책은 첫째 아와 둘째 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셋째 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도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 기업도 여성들이 직장 일도 하면서 애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B: 직장생활하면서 집안일까지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직은 가정에서도 가사 일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줘야 쉴 시간이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 E: 저는 고령산모이다 보니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병원비도 부담이 되었지만 애 낳다가 잘못되면 어쩔까? 걱정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애를 갖기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 F: 처음에는 애들을 좋아해서 두 세명 정도 많이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 임신중인데 출산하기도 전에 지쳐버렸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양수 검사 하

나 하는데도 수십만원이 들어요. 괜히 둘째를 가졌나 애 낳을 출산 준비물 사면서 기쁨보다는 걱정이 되네요.

G: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지금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나 자신 자아실현도 할 수 없고 직장 일도 어려움이 많아지니 어렵네요.

K: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보니까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 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요. 그래서 출산 계획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3.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육아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육아 부담은 유치원비만이 아니라 애를 기르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많은 육아 비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남아 있고 여성들에게 출산 의식을 갖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빈곤아동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rmby & Cigno, 1988; Whittington, 1992; Zhang et al., 1994).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 시켜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은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B: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유치원비만이 아니라 옷도 사줘야지요. 남들은 다 가는데 학원에 안 보낼 수도 없지요.

C: 아기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애들 키우는데 의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H: 동사무소에서도 연령별로 애들이 필요한 놀이기구들을 대여해주는 서비스 해주면 좋겠어요. 몇 개월만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려워요.

자녀교육비는 큰 부담

경쟁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데 자녀교육비 부담은 출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출산율 포기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현실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출산 의식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9). 정부가 경쟁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려는 원인을 제거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진다면 여성의 출산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B: 더 낳고 싶어도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더 낳아서 다른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아요.

F: 아기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큼니다. 아기 하나 키우는 데 보통 3억 정도 들어가니까, 저는 애를 그만 낳을 생각이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노후대책이 더 시급해요.

J: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보육료지원과 더불어 교육비를 전체 무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교육비가 제일 부담이 큰데 정부에서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주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생각이 들겠지요.

4.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역부족

출산장려정책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아이를 출산해 어려움 없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록 보육료 지원에서부터 교육비, 건강지원, 그 외 다른 지원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 지원 부처를 통합하여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연금보험료 경감과 건강 보험료 경감은 출산 휴가 기간 중에 사회 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여 모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 감면이나 세금 환급은 실제로 양육 비용을 대치하는 데는 미미하다는 연구(이재경 외, 2005)가 있다. 그러나 노승희(2010)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일환인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의 확대 등 여러 출산 지원 정책 연계가 출산을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고하였다. 한승준(2002)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출산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연계가 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 A: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있잖아요.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에 회사 눈치를 많이 보지요. 다른 정책과 연계가 되어 정당하게 출산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B: 형제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육료 지원에 한정한다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비 지원과 그 외 다른 지원 정책이 연계되어 다자녀를 가지는 가정에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 D: 출산하는데 나라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비, 불임병원비, 산전검사비 등 출산에 필요한 병원비가 아이 하나 갖는데 너무 많이 들어요.
- I: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은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세제혜택이나 건강보험혜택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산모의 건강지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M: 한명 기르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출산을 보류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더 나으면 당장에 내 자신의 꿈은 모두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기적 일시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의식 변화에 한계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단기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인구수 늘리기에 치중하였다. 먼 미래의 자녀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기적 지원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의 효과성(석호원, 2011)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정책을 제외한 다양한 정책들의 활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적인 자치단체간의 단기적인 출산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C: 자치단체 간에 경쟁적으로 주민 수 늘리려고 출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출산해서 먼 미래의 비전이 보이면 좋겠어요.
- D: 어릴 때보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출산도 아직 하지않았는데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네요.
- G: 지금은 아이가 없는데 원래 두 명 정도 낳으려고 했는데 한 명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의 출산지원예산이 벌써 다 떨어졌다는 말도 있어서 출산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5. 소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첫째, 출산장려정책의 체감성이 낮게 나타났다.

출산여성들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보육료지원정책 외에는 대부분 많이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지자체가 출산교실을 거의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유식 지도, 건강 상담 등을 통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는 도시에 비해 건강 상담, 성상담·성교육, 유산예방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영·방은령, 2008).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홍보 부족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 수당 등 경제적인 지원 외에 다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출산 유인이 되지 못하여 체감 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직장내 보육시설이 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집안에서도 가사 일을 전담하면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출산을 제고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 요인은 출산·육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립을 목표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다(Swedis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이삼식 외, 2009). 또한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남녀의 성 역할 분리 퇴색 등이 출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소영, 2008). 본 연구결과에서도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부족과 여성에 집중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은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가임여성들의 출산 양육 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지적된다(이미란, 2009). 이성용(2009)의 연구에서도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관련 정책은 첫째 아와 둘째 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셋째 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는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은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필요하지만, 특히 민간 기업에서는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산모 건강을 위하여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어려운 실정이고 출산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분위기로 나타났다. 즉 출산을 장려하는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육아 부담은 유치원비만이 아니라 애를 기르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한 많은 육아 비용은 현실적으로 출산에 어려움으로 남아 있고 여성들에게 출산 의식을 갖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빈곤아동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이 출산을 제고에 효과적인 것이다(Barnby & Cigno, 1988; Whittington, 1992; Zhang et al., 1994).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 시켜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은 출산을 제고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경쟁적인 사교육으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여 출산을 포기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출산 여성의 자아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노후를 대비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현실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출산 의식으로 작용한다(조선일보, 2009). 정부가 경쟁적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려는 원인을 제거하여 주고 공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주어 자녀

의 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출산 부담은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아이를 출산해 어려움 없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에서부터 교육비, 건강지원, 그 외 다른 지원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 지원 부처를 통합하여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연금보험료 경감과 건강보험료 경감은 출산 휴가 기간 중에 사회 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여 모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 감면이나 세금 환급은 실제로 양육비용을 대치하는 데는 미미하다는 연구(이재경 외, 2005)가 있다. 그러나 노승희(2010)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의 일환인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의 확대 등 여러 출산 지원 정책 연계가 출산을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고하였다. 한승준(2002)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이 전반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연계가 되지않아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단기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인구수 늘리기에 치중하였다. 먼 미래의 자녀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단기적 지원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의 효과성(석호원, 2011)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지원정책을 제외한 다양한 정책들의 활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적인 자치단체간의 단기적인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즉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되어야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이론적 수준뿐만 아니라 경험적 수준에서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인 배경에 머물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의 출산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사례연구를 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등 경제적인 지원 외에 세제혜택, 건강보험료, 산모건강지원 등 다른 부분에서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피부로와 닿을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출산유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가정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사 부담이 되어 있지 않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도 친가족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이 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육아 휴직 활성화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출산 후 근로복귀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로 출산장려에 근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자녀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경제력이 확보되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양육비는 유치원비만이 아니라 애를 기르는데 의

식주 비용, 의료비, 그 외 많은 비용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부담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진다면 여성의 출산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보육비 지원은 공적 보육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기관과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미미하게 작용하였다. 그 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이 보육료 지원과 교육비, 건강 지원, 각종 세제혜택 등 그 외 다양한 다른 출산장려정책과 연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단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른 장려정책과 연계가 되도록 출산장려 부처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산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먼 미래의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가족자원경영학회의 연구 동향은 최남숙(2007)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가 있었고, 이소영(2008)은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선형(2009)은 자녀교육비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후속 연구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출산의식의 변화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의 출산장려정책이 여러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여성들의 출산의식 변화에 효과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예산과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된 출산장려정책이 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가정에서는 육아에 남성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양성평등환경이 조성되고, 기업에서도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 유연성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제도화 하여야 한다. 셋째, 출산과 양육,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나 여성의 노후 보장까지도 고려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면 여성의 출산의식 변화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여성의 가치관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연구로 출산장려정책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관계부처 합동(2006). 출산장려정책 자료. 관계부처 합동.
- 2) 김두섭·박상태·은기수(2002). 한국의 인구 2. 통계청.
- 3) 김미옥(2007).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엄격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4), 165-166.

- 4) 김민정(2011).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프랑스 가족정책과 출산장려. 민족연구, 48, 74-96.
- 5)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1-34.
- 6)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4, 16-24.
- 7)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1-23.
- 8) 남정은·정정희(2013). 자녀 양육 양상을 통해서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1980년대 중반-2000년대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2), 53-78.
- 9) 노승희(2010). 기혼여성의 출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3) 지역과 문화 감: 내고장 지금, 아이 낳아 좋은 사회로 만드는 출산장려정책. 지방행정, 62(718), 56-59.
- 11) 박지영·조정래(2013).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정책 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출산장려금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526-544.
- 12) 배상석(2010).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수도권 자치단체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9(4), 273-299.
- 13)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143-180.
- 14) 송현재·김지영(2013). 출산장려금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 15(1), 3-27.
- 15) 신효영·방은령(200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충청남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 205-227.
- 16) 안중범(20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국제무역경영연구총서, 97-10(1), 1-107.
- 17)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9-166.
- 18)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19) 이미란(2009). 출산장려정책이 미혼 여성들의 출산양육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3), 75-96.
- 20) 이선형(200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20-45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43-64.
- 21)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2(1), 1-185.
- 22) 이소영(2008).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5-30.
- 23) 이순배(2009). 영아보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장려의 관계-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 한국지역혁신논집, 4(2), 57-78.
- 24) 이시원·김영기·이성진(200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8(1), 83-103.
- 25) 이용복·이소희(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95-113.
- 26)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7(4), 67-90.
- 27) 이재경·조영미·유정미·이은아(2005). 유럽의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21(3), 154.
- 28) 이충환·신준섭(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97-124.
- 29) 임상규(2007). 행정학, 교육, 연구 공동체의 미래와 정책 재창조: 출산장려정책의 경제적 도구 선택을 위한 효과성 비교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3-198.
-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세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31) 조선일보(2009). 한국의 부모들은 왜 애 낳기를 꺼리나. 조선일보사.
- 32) 차경욱(2005).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37-148.
- 33) 최남숙(2007).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53-63.
- 34) 최숙희(2008). 여성고용이 일과 가정의 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성경제연구, 5(2), 99-115.
- 35)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인 출산을 제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36) 최옥채(2008). 사회복지사를 위한 질적 연구. 서울 : 신정.
- 37) 최정미(201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1), 138-161.
- 38) 통계청(2012). 2012년 출산통계 결과. 통계청.
- 39) 한승준(2002). 복지개혁모형의 수렴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1-21.
- 40) 황진영(2013).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합계출산율: 국가간 실증 분석. 재정정책논집, 15(1), 81-105.
- 41) 홍정화(201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제안. 법과 정책연구, 12(3), 1141-1175.
- 42) Barmby, T. & Cigno, T.(1988). A sequential probability model of fertility patter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1), 31-51.
- 43) Blau, D. M. & Robins, P. K.(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2), 287-299.
- 44) Edmund Sherman & William J. Reid.(1994). 유태균·이선혜·서진환 역(2003).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서울 : 나남.
- 45) Ermisch, J.(1989). Purchased child care, optimal family size and mother's employment: Theory and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 79-102.
- 46) Hoffman, L. W. & Hoffman, M.(1973).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 Basic Books, 19-76.
- 47) John W Creswell.(1998). 조홍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2010). 질적 연구 방법론 : 다섯 가지 전통. 서울 : 학지사.
- 48)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Sage.
- 49) Padgett, Deborah K.(2001). 유태균 역(2005).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나남.
- 50) Rønsen(2004).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 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10(10),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51) Sleebos, J. E.(2003). Low fertility in OECDcountries: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5.
- 52) Stake, R. E.(1995).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2000). 질적 사례연구. 서울 : 창지사.
- 53) Swedis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2005). Swedish family policy: Fact sheet.

- 54) Whittington, L. A.(1992). Taxes and the family: The impact of the tax exemption for dependents on marital fertility. *Demography*, 29(2), 215-226.
- 55) Yin, R. K.(2003). 신경식·서아영 역(2011). 사례연구 방법. 서울 : 한경사.
- 투 고 일 : 2013년 9월 30일
 - 심 사 일 : 2013년 10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11일